시 론

지금 검찰은 윤석열의 검찰인가?

김 희 준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변호사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최근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를 향한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언론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대결양상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검찰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고 그의 뜻대로 검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중에 실제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선검사장들의 존재감은 온데 간데 없다. 오직 검찰총장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 근래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라는 표현은 그 단적인 예이다. 예전에도 검찰총장의 이름으로 검찰을 표현한 적은 필자의 기억으로는 없다. 여당 쪽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에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는 패스트트랙 수사 등 야당을 향한 수사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만 열을 올린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지난 정권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장면들이다. 과거의 검찰은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에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권의 시녀 또는 정치검찰이라고 줄곧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검찰개혁의 핵심과제가 되었고 국민들은 누구에게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을 간절히 원했다. 그런데 현재의 검찰은 과거의 검찰과는 달리 집권 중반기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과감히 칼을 들이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대다수 언론의 분석처럼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견해가 반드시 틀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도 중첩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필자는 조금 달리 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 정부 들어 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검찰에서는 주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를 주된 처벌수단으로 활용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거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사실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는 원래는 처벌조건이 까다롭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성립 범위를 매우 좁게 보아 거의 장식장 속에 있는 범죄유형에 불과했다. 그런데 적폐수사를 계기로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죄명으로 화려하게 부활하였고 최근의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위 죄명들이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공무원들의 경우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신들이 업무상 처리를 했던 일로, 그 당시에는 조직의 방침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일들로 형사처벌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검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예전에는 수사가 종결돼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현재는 과거에 했던 수사들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 언제든지 특검이나 재수사 등의 형태로 다시 수사가 개시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흠이 발견되면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검사들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만약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리에 관한 증거나 수사단서가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록 그 당시에는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덮는다면 나중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검사를 그만둔 후에라도 언제든지 형사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만연히 대검의 방침에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나중에 수사부실로 밝혀졌을 경우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랐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고 검찰총장이 대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는 증거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수사를 확대했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사를 멈춘다는 것은 어렵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검찰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지휘하고 있다는 견해는 틀릴 수 있다. 이제는 검사들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수사가 특히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중요한 사건일수록 더욱 법과 원칙대로 증거를 따라서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반하는 지시는 아무리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따를 수 없고, 따라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야 몇년 뒤에 특검수사나 재수사, 세 번째 네 번째 수사가 행해지더라도 신체적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고 무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검찰이라는 말은 틀렸고 그래서도 안 된다.

검찰권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도 없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진짜비리만을 척결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다.

문화난장

최흥종과 5·18

홍 인 화
전 광주시의원·국제학박사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최흥종 기념관을 개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그의 삶이 민주, 인권 평화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 한편 '광주의 아버지'로 불린 최흥종 선생의 정신을 광주정신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 작가들이 최흥종 목사 서거 51주년(2017년)을 맞아 '오방의 빛'전을 5월에 개최했다. 전시회에 참여했던 작가들 5명이 모두 다 작품 13점을 기념관에 기증했다. 마치 기념관이 지어질 것을 예측하고 그린 것처럼 참 어울리는 작품들이었다. 또 내년 2020년은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자 광주YMCA 100년을 맞는 해다.

최흥종 목사는 1880년 광주시 불로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대한제국의 광주 경무청 순검을 지내기도 했는데, 화순에서 일본군 몰래 체포된 의병 12명을 풀어주고 그만두었다.

1904년 광주 제중병원(현 광주기독병원)에 근무하며 우일선 선교사와 포사이드 선교사를 도와 한센병 환자 치료에 헌신했으며, 3·1운동 당시 광주지역 총책으로 민족운동에 뛰어들어 만세시위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또, 광주YMCA를 설립하고, 광복 후에도 결핵 환자와 한센병 환자 등 사회적 냉대를 받은 사람들을 돕는 빈민구제 활동에 힘썼으며, 신간회 광주지회장과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전남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광주를 대표하는 사회 운동가로서의 삶을 살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광주지역 첫 장로이자 목사로서도 활발한 선교활동과 교육운동에 전념했던 고인의 장례식은 1966년 5월18일 광주 최초의 사회장(社會葬)으로 치러지기도 했다.

오방이 살아냈던 나눔, 헌신, 사랑, 저항의 정신은 5·18 정신과 맞물린다. 역사적 민중항쟁과 개인사라는 근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역사를 대하는 지점에서 서로 교감 하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는 긴 세월 동안이나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역사이며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지만 모두가 1980년 광주를 민주화운동 출발점, 기폭제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광주가 격렬한 투쟁에도 도덕성과 헌신성 측면에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범적 사회변혁투쟁이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에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받아,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일련의 활동과 이후에 이 사건의 책임자처벌,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기록되고 생산된 문건,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총칭한다. 주요 소장처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가기록원, 육군본부, 국회도서관, 5·18기념재단 등이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큰 전기가 됐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져 왔고, 그런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현 정부가 광주항쟁을 세계사에 유래 없는 이성적 도덕적 투쟁이라고 규정한 만큼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계승 방안을 위해 광주시민과 더불어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라고 말한다. 이 21세기를 준비하고 기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능성과 역동성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방 선생이 공동체적 실현을 위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직접 실천하는 삶을 살아냈다. 민족독립운동가, 사회운동가, 기독사회운동가로서 광주 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오방정신은 광주공동체 철학과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맥이 닿아 있어 광주정신 인물로 기억돼야 한다. 오방정신이 광주정신이고 의병정신이고 독립정신이고 민주정신이다. 광주정신은 광주에서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다가오는 2020년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우리는 5·18정신, 광주정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할 유산은 무엇인가를 세말 세초부터 고민하고 노력해야할 것이다.

독자투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도우미

어느덧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다가오는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 관계법 등 안내 및 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활동을 지원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할 때다.

공정선거지원단은 2000년 2월16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부정방지 강화 측면에서 선거부정감시단 제도를 도입한 후에 2012년까지는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운영됐다. 2013년부터 규제중심의 '선거부정감시단' 명칭에 대한 정치권 등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사후 조치보다 사전안내, 예방 우선의 원칙을 확립시키면서 대내외적으로 친근감을 주는 '공정선거지원단'으로 개칭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기에 따라 일반지원단과 선거지원단으로 나뉘는데, 평상시 운영하는 지원단은 '일반지원단', 선거시 확대 운영하는 지원단은 '선거지원단'이라고 부른다.

선거범죄는 다발적이고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상시로 선거 정황파악과 위법행위 단속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필자도 이번에 우연한 계기로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됐다. 지원단을 하기 전에는 선거일은 그저 쉬는 날이었고, 선거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인원이 동원되는지도 몰랐다.

이 지역에 살면서도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동네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서 기부행위 관련 안내도 하고, 사전투표체험 행사도 하면서 투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진형·장성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社 說

총선 후보들 '두루뭉술한 출마의 변' 실망

내년 4·15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총선 시계'가 돌연 빨라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들이 내놓은 출마의 변의 거개가 현 정부와 인연을 내세우고 있을 뿐 정작 자신의 지역발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크다.

본지가 내년 총선 입지자들의 출마의 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정책은 없고 '이미지'를 드러내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권당 후보들의 경우 촛불혁명으로 일궈낸 문재인 정부와의 인연과 청와대 출신임을 내세우는데 급급해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비후보자들의 말을 대체적으로 옮기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완성해야 한다", "국정과제를 완성하고 나아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는 식의 약속이다. 국정 과제와 입법 뒷받침에 관해 자세한 설명은 없다. 유권자들이 뽑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자신의 정책과 경쟁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후보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묻는 질문에 보통 "향후 별도로 말씀 드리겠다"며 회피한다. 이러니 정말 지역의 참일꾼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청와대 경력과 촛불정권 타이틀로 무임승차를 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비후보자들은 정치공학에만 매몰돼 있다는 질책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호남 대변자, '뉴DJ'를 적극 발굴하자는 목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간 집권당 소속 지방의원의 오만과 독선이 이어진 분위기여서 지역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예비후보자들이 진정한 지역 일꾼이나 동량이라면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타이틀'에 기대는 것을 자제하고 자신만의 정책과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오롯이 보여주고 지역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그러면 지역 유권자들도 그런 후보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주춤하던 음주운전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송년회 등 이런저런 모임이 많은 연말에 '한번 음주운전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음주운전자의 차량 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 광주 서구 주택가 도로에서 만취한 30대가 몰던 승용차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였다. 또 광산구 한 상가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차를 들이받은 후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32.4% 줄고, 2년 연속 3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윤창호법 시행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총 4천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나 줄었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사전 방지책이 절실하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방침을 즉각 전개해야 한다. 경찰은 최근 지방청과 경찰서,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주·야간은 물론 심야에도 장소를 불문하고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겠다고 했다. 연말연시에 들떠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이행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단속기간을 확대해서라도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운전자들이 갖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너무 적나라하게 알고 있다. 술을 마셨으면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는 건 현대인의 상식이다.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나 동료는 차량 소유자의 음주운전을 못하게 해야 한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향한 존중과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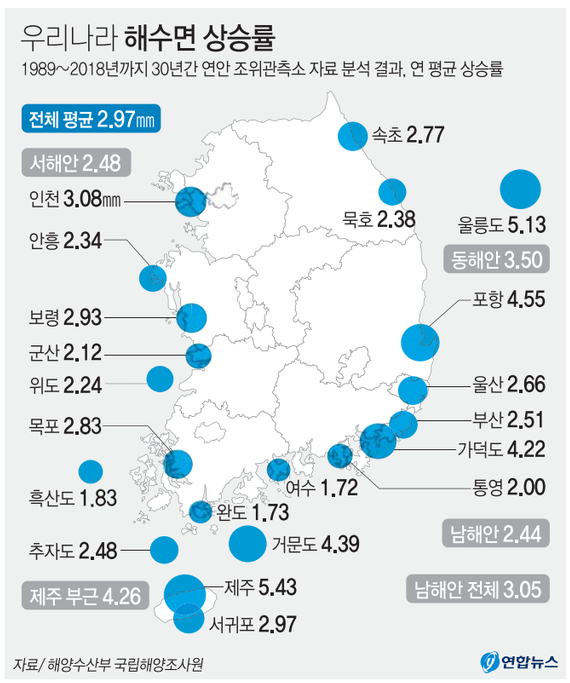
해수면 상승 한국도 남의 일 아니다…매년 2.97㎜↑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바다의 해수면이 연평균 2.97㎜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고자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간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해역별 연평균 상승 폭을 보면 제주 부근이 4.26㎜로 가장 컸다. 이어 동해안 3.50㎜, 서해안 2.48㎜, 남해안 2.44㎜ 순이었다.

관측지점별 연평균 상승 폭을 보면 제주가 5.43㎜로 가장 컸다. 울릉도 5.13㎜, 포항 4.55㎜, 거문도 4.39㎜, 가덕도 4.22㎜ 순이었다.

또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 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2.97㎜보다 높은 3.48㎜로, 시간이 갈수록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 현황 분석과 미래 전망은 연안관리, 개발, 국가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논설실장 鄭鎭坦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